

민주노총 위원장

단 병 호

지난 9월 민주노총 신임위원장에 당선된 단병호위원장을 만나 민주노총의 향후 과제와 진로에 대해 물어보았다. IMF관리체제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주노총호의 선장이 된 그가 갖고 있는 생각과 계획 그리고 비전을 들어본다.

- 때 : 1999. 10.5 (화)
- 곳 : 민주노총 위원장실
- 대담 :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정리 :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교육위원

이원보: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민주노총 위원장에 당선 되신 것에 축하드립니다. 대의원대회에서 부인과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나누셨는데 추석 때는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추석 동안 대통령은 청남대 구상을 했다고 하는데, 민주노총의 발전과 관련해 어떤 밑그림을 그리셨는지 궁금하군요?

단병호: 추석 때 나를 모두 집에 있어 지우셨어요. 그냥 록 쉬었습니다. 방문사

절로 찾아온 사람은 별로 없었구요(웃음). 인근에 사는 고향 친구들을 좀 만났습니다. 한참 못봐 풀만이 많은 친구들이었죠. 물론 집안 식구들도 풀만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수습했지요(웃음).

이: 10년 동안 감옥을 네 번이나 가셨는데 간만에 친구관계와 집안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리라 싶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요. 밖에서 보기



에 민주노총이 당연한 일은 민주노총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 여겨지고, 이것은 위원장의 지도역량에 대한 신뢰 및 지지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번 대의원대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확보하면서 당선되었는데...

단: 우선 압도적인 지지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단독후보로 출마하여 80%밖에 못얻었으니 압도적이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20% 가량이 반대 혹은 기권했는데, 이 점은 제가 경각심을 갖고 일하는데 밑바탕이 될겁니다.

이: 잘 아시겠지만, 1기 노사정합의 이후 비대위의 파업철회와 작년 총파업 때 협주의로 흘렀다는 비판이 대표적인데요.

단: 저와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평가가 있습니다만, 비대위 파업 철회와 관련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업 조직에서 책임질 수 있는 총파업 결정이 있느냐 하는 점이지, 총파업을 하기 위해

시는 그 주제인 산하연맹들의 충분한 준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실제 형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민주노총을 둘러싼 객관적인 상황도 총파업을 감행하기에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파업 투쟁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98년 총파업과 관련해서도 "타협적"이란 평가에는 동의하기 힘들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제 역량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근거로 실현가능한 투쟁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6월 10일 총파업 돌입이 단위노조대표자회의 때 결정된 민주노총의 방침이기는 했지만,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타진해본 결과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연맹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당시의 총파업 돌입 결정이 주제 역량과 주변 여건을 치밀하게 고려해서 내려졌다고 보다는 당시 진행되고 있던 금속연맹 차원의 파업 투쟁을 위한 정치적 배수전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에서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하



조직의 전면 개혁이 필요합니다.
 예상되는 변화 상황에 조직이 능동
 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꿔야 합니다.
 좋지 않은 관성, 관행, 타성은
 철저하게 없애야 합니다.

이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만, 당시는 파업투쟁을 조직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를 말판으로 다시 준비하고 조직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여 '6·10 총파업 철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민주노조운동을 대표하는 민주노총의 새 집행부로서 민주노조운동에서 계승해야 할 특성이랄까 강점이랄까 어떤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까?

단: 기업별노조체계에서도 노동운동이 활발했던 이유는 직접민주주의, 조직내 민주화가 큰 동력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들은 이후에도 전체 운동에서 반드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노동조합은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노자관계에 대한 대립지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투쟁기풍을 유지하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됩니다. 민주노

총이 만들어지기까지 이 두 가지가 중심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와 관련해서 99년 평가예선가요, 민주노조운동의 특성을 현장성, 변혁성, 투쟁성이라 하였는데 방금 하신 이야기와 같은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단: 같은 뜻으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94년인가 한 운동단체가 만들던 '진보'라는 잡지로 기억되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민주노조운동을 개념으로 정리하면 어떤 것이냐고 묻기에, 민주성, 현장성, 투쟁성, 변혁성, 계급성 같은 대어섯 가지의 개념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현실적인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원칙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른 한편으로 민주노조운동 10년 사이에 늘어붙은 관성같은 것도 있고, 꼭 개

해되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조직 안쪽으로 내부 규율이나 질서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고요. 지난 대의원대회 때 이수호 사무총장님께서 하신 얘기지만, 회의시간 준수같은 문제도 있는데요.

단: 사실 작은 데서 무너진 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예컨대 상급단체의 회의보다 더 중요한 시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관성화되고 제대로 제어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유세를 통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조직의 전면 개혁이 필요합니다. 예상되는 변화 상황에 조직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뀌어야 합니다. 좋지 않은 관성, 관행, 타성은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회의 문제, 시간 문제, 규율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규율과 규칙 같은 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꾸준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의식적인 측면에서도 개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2기 집행부는 조직혁신안을 운동발전의 대안으로 제기했었습니다. 단위위원장님이 공약으로 내건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와는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틀립니까?

단: 전 집행부가 조직혁신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감옥에 있어서 역할과 활동, 그리고 그것이 내건 혁신의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조직혁신위원회는 제도적 측면을 개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확장된 활동을 해야 합니다. 노동운동이 무엇을 지향하는 지에서부터, 어디로 어떻게 가야하는 지에 관한 방향설정, 나아가 이념과 노선에 대해 검토하고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이 자기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어야 합니다.

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단: 선언과 강령을 포함한 규약 전반에 걸친 제도적인 문제는 당연히 혁신 개선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운동의 중장기적인 과제도 점검되어야 합니다. 중장기적인 방향이 정리될 때 사업이 당면 현안에 급급하는 즉흥성을 벗어나 일관성을 갖게 되겠지요. 조직 체계, 특히 산별건설 문제도 다뤄야 합니다. 산하 연맹들이 산별노조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 고만이 조직과 운영을 넘어 산별건설 이후의 사회적 역할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어떻게 만드는 가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과제인 건설 이후 산별노조의 정책 과제와 역할 수행 문제를 민주노총 차원에서 미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의식개혁 문제도 짚어야 될 것입니다.

하이든 전체 운동의 토대를 새로 짚는 작업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이를 대중적으로 논의하고 공유해서 큰 힘을 받을

정파간의 이해대립이랄까요, 견해 차이가 발전적으로 전개되기보다는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많은데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로 만들 생각입니다.

이: 주어진 임기가 매우 짧은데 것처럼 방대한 구상을 실천에 옮기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방안과 일정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단: 전략위원회 구성 문제는 지금 고민 중인데, 제 개인 생각으로 위원회 구성은 민주노총, 신별연맹, 지역본부의 임원급을 중심으로 하되 노동조합 조직에 국한하지 않고 학계 등 외부인력도 폭넓게 참여시켰으면 합니다. 올해 말까지 구성과 운영 문제를 점검하고, 예산배정 안도 마련해야 될 겁니다. 내년 1월 쯤 열리는 정기대의원대회 때, 예산까지 포함하여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1년 정도는 운영해야 되리라 보며 조사, 연구, 홍보가 주요 활동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 1, 2기 평가를 넘어 민주노조

운동 10년을 평가해야 할 것이며, 현재 진단은 물론 큰 틀에서의 미래 예측까지 다뤄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과 내용을 대중적으로 모아내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과정이 교육 및 선전 사업과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중적 사업과 연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활동 결과를 단순 제시하는 것을 넘어 통일된 안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에 관한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올 초 우리 연구소에서 번역 소개한 남아프리카 COSATU의 섹터위원회 활동과 비슷한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단: 저도 「섹터비보고서」는 읽어보았습니다. 남아프리카와 우리나라는 상황과 조건이 다른 만큼 구체적인 결과물은 틀릴 수 있지만,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집약, 정리하고 조합원들과 공유해 나가

다양한 정파는 먼저 상호존중하고 인정하는 속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어렵다면 사업 과정에 민주성을 결합시켜야 합니다. 절차를 밟는 가운데 다수 의견으로 결정되면 이것이 존중되고, 이런 결정을 함께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는 과정은 비슷한 측면일 겁니다.

하지만, 선텐비위원회가 그 활동 결과물 제출하고 선텐은 노조 조직에 맡기는 과정을 밟았다면,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는 여기서 더 나가 마련된 단일안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 수준에서 크게 나아가 민주노조운동 차원의 통일적인 견해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이: 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많은 논쟁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민주노총 내부의 정파 문제가 안팎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분열이라고 하고 혹자는 입장정립이라고도 합니다. 정파간의 이해대립이랄까요, 견해 차이가 발전적으로 전개되기보다는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나름의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으로 자기 입장이 없다면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겠지요. 이런 의미에서의 정파라면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의 확신과 입장이 없으면 운동을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변화에 대한 주관 혹은 신념은 필요합니다. 이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겠지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파나 종파 혹은 계파로 가는 것은 극복되어야 합니다.

현재 있는 다양한 정파는 먼저 상호존중하고 인정하는 속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어렵다면 사업 과정에 민주성을 결합시켜야 합니다. 절차를 밟는 가운데 다수 의견으로 결정되면 이것이 존중되고, 이런 결정을 함께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쉬운 것은 저도 그런 부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사업의 결정과정과 그 내용이 자기 생각대로 안되면 외기소침하거나 심지어는 반감을 갖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민주노총과 정부와의 관계 문제는 정부에게 공이 넘어갔습니다. 1기 노사정합의, 지난 5월의 노정합의, 7월의 노정합의 가운데 뭐가 지켜졌습니까? 이런 마당에 노동자들이 정부를 불신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민주성이 아닙니다. 다양한 토론과 대화의 장을 통해 견해 차이를 좁히려 노력하되, 일단 결정된 사항은 존중하고 같이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지금까지 내부사정도 모르면서 민주노총 혹은 간부들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이 자주 있었는데요. 이럴 때마다 민주노총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으니까 일반 대중 사이에 노총에 대한 권위와 신뢰가 손상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 비판은 어디서나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옳고 적관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비판은 자유롭게 이뤄지되, 다만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이해와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에 근거한 이해와 판단이라면, 그 내용과 입장이 다르더라도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강한 비판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에 근거한 비판을 하는 풍토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판이라고 한다면, 공식 비공식으로 즉각 시정토록 할 것입니다.

이: 노동운동의 과제로 산별노조 건설, 정치세력화, 현장조직 강화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장조직이 왜해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 차원에서 현장조직 강화 사업을 어떻게 풀어갈 계획이신가요?

단: 지도 현장조직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데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일상활동과 토론이 진무합니다. 대중, 즉 조합원을 상대로 한 교육, 토론, 활동이 없습니다. 우선 일상활동을 복원하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대정공이 좋은 사례를 보여줍니다. 현대정공노조가 십이삼 년 해오면서 투쟁도 많이 하고, 단

압도 많이 받았지만 여전히 다른 노조에 비해 튼튼하고 활발합니다. 그 동안 현장에 토대해서 활동을 해왔고, 무엇보다도 현장토론과 일상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범 사례는 다른 노동조합에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 측면에서의 활성화도 필요합니다. 자본의 논리를 노동의 논리로 압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은 단순명쾌하게 정리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비해,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대안을 개발하고 그것을 조직 곳곳에 전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 산별노조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상황을 돌아볼 때, 산별연맹의 역할이 민주노총에 집중돼서 산별연맹의 역할과 위상이 비어버리는 듯한 측면이 크고, 일각에서는 산별노조 건설이 아니라 민주노총만 강화하면 된다는 필요 없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들리는데요.

단: 지금의 연맹 체제에서든, 앞으로의 산별노조 체제에서든 기본 골간은 산별입니다. 산별이 중심입니다. 이게 바로 서야 민주노총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산별이 중심에 안서면 노총 차원의 사업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산별이라는 축이 확고히 서야 민주노총이 자기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연맹과 노총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단: 연맹과 노총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해야지요. 올바른 방향과 내용 속에서 사업의 구분과 역할의 분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산재문제로 자살한 이상관 동지 건을 봅시다. 지금 이 건과 관련한 사업을 민주노총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금속산업연맹을 움직이지 않고서는 투쟁동력이 안붙어요. 교섭과 투쟁은 연맹이 책임지되, 노총은 정책적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이 바람직합니다.

단위노조와의 관계 문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민주노총과 단위노조가 바로 결합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단위노조는 산별연맹과 바로 결합되고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민주노총, 산별연맹, 단위노조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본부는 노총이 결정한 것을 집행하는 단위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 이제 시선을 노동운동 밖으로 돌려 봅시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대자본 대정부 관계 설정 문제가 대단히 어렵다고 보이는데요. 김대중 정부를 어떻게 보고계신가요?

단: 그 동안 정부의 경제정책은 재벌 개혁에서는 이전 정권과 차별성이 보이지 않지만,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는 개선된 게 거의 없습니다.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노동정책에서 정부는 완전히



벌써부터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민주노총이 핵심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두 조직이 서로 묶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했습니다. 분명한 원칙과 철학 없이 임기응변으로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노동을 활용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리해고와 고용문제를 정부가 너무 가볍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 본연의 임무가 국민의 생존 보장이고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가 과연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알고 있거나 한 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국민 생존을 경제논리에 종속시키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김대중 정부의 개혁에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단: 정부가 개혁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개혁이 실종되었습니다. 의의통합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노사정 합의사항 아닙니까? 개혁 개혁 하는데 국민들이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는 별로 없습니다.

이: 그렇다면 정부와의 관계가 잘 풀리는 어렵겠군요.

단: 민주노총과 정부와의 관계 문제는 정부에게 공이 넘어갔습니다. 1기 노사정 합의, 지난 5월의 노정합의, 7월의 노정합의 가운데 뭐가 지켜졌습니까? 이런 마당에 노동자들이 정부를 불신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정부를 불신하는데 정부와 민주노총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노정관계가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식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공은 정부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사회운동의 중심에 민주노총이 서온 것은 분명하지만, 민주노총이 실질적인 연대의 구실이 되지 못하고, 민중연대가 산만하게 전개된 듯합니다. 특히, 요즘 들어 민주노총의 '민중운동 편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있고요. 민주노총의 민중운동과 시민사회운동과의 관계 문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설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단: 1기 집행부와 2기 집행부의 경험을 종합하면 답이 보이지 않나 싶은데요. 1기 때는 연대가 시민사회단체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습니니다. 민중연대, 즉 노동자 빈민 농민 간의 연대는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물론 당시 빈민과 농민의 주체 형성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민중연대가 간과된 측면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2기 때는 기층 민중간의 연대가 주되게 이뤄지고,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는 간과된 측면이 큼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답이 나옵니다.

저는 노동조합 연대의 기본 틀은 기층 민중과의 연대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되지요. 사회 변화를 위해서는 시민사회로 연대 폭을 넓혀야 합니다. 기본 연대는 민중연대를 토대로 하되, 그 외연을 넓혀 사회시민단체와의 연대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을 큰 기반으로 하여 민주노동당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민주노동당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치세력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단: 벌써부터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민주노총이 핵심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두 조직이 서로 묶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은 정당 중심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사업과 활동으로 뒷받침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업은 없고 형식만 걸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된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창당까지 끌고 가서는 안됩니다.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정당과 노동조합은 상호 독립적인 관계이되, 협력과 지원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단: 정당과 노총간의 긴밀한 관계를 전제로 공신력을 갖춘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당공동대표들과 민주노총 임원들로 이뤄진 상시적인 협의체야를 만들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당사업과 관련한 실무는 민주노총 산하 정치위원회가 맡아야겠지요.

이: 민주노총 집행부가 바뀌면서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에서 민주노총 몫의 공동대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 지금 이갑용 전위원장님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 개인차원의 대표성과 조직차원의 대표성이 겹쳐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공동대표 이야기도 있었는데, 저는 안찬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갑용 전위원장 문제

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민주노총의 조직대표 자격은 아니지만, 본인이 공동대표를 할 의사가 있다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갑용 전위원장이 본인은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인터뷰가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노동운동의 발전을 애길할 때마다 운동의 통일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운동의 통일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할 수 밖에 없는데, 한국노총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장기적으로 볼 때 두 조직이 어떤 관계로 가야할까요?

단: 저는 오래 전부터 줄기차게 1국 1노총, 1산업 1노조를 주장해왔고, 이 때문에 오해를 받은 적도 많습니다. 지금도 이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한국노총과의 관계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민할 시기는 아닙니다. 생생배경과 성장과정이 서로 다릅니다. 이 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노총이 그 동안 자주성과 민주성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방향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의보통합 문제가 단적인 예입니다. 한국노총의 주장은 국민건강권 확대라는 차원에서 올바르지 못합니다. 정책에서도 구체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이것은 통

합으로 해결할 수도 없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지금의 박인상 위원장 체제가 이전의 다른 체제보다 나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운동의 본질문제는 여전하다고 보며,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럼 두 조직간의 관계를 적대관계나 경쟁관계로 보십니까?

단: 그렇다고 적대관계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통일된 정책, 동질적 사업이 제기된다면 적극 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차이는 차이대로 인정하되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연대해야 되겠지요.

이: 최근 3년 동안 남아프리카의 COSATU, 브라질의 CUT, 한국의 민주노총 사이에 3국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노동조합운동 차원의 '남-남' (South-South) 교류가 이뤄졌습니다. 또 제3세계, 특히 아시아 지역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을 배우자"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민주노총의 경험과 활동을 공유하려는 열망이 있는데, 이제 민주노총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 오히려 이 문제는 소장님께 여쭙볼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웃음). 저 역시 국제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맹이

나 노총이 워낙 돈이 없다 보니 경비를 대주는 데는 가고, 그렇지 못한 데는 못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지금의 국제 연대 수준입니다. 앞으로는 어렵더라도 가야 할 데는 꼭 가고, 경비가 나오더라도 갈 필요가 없는 데는 안가는 가닥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제노동운동 안의 '진보블럭' 간의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민주노총의 역할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결국은 예산 문제인데, 이제는 마냥 미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

한 예산은 짜내야지요.

이: 장시간 인터뷰에 감사합니다. 미리 질문지도 보내드리지 않고 갑자기 들이닥쳐 훨씬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일을 헤쳐가면서 단위원장님의 건강은 어떻게 유지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남다른 건강비법이 있는지요?

단: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뭐든 잘 먹고, 어디서나 잘 자는 게 특기라면 특기랄까요(웃음). 감사합니다. ❖